

[해설]  
동부고시학원  
행정학 임혁 선생님

0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 ②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의 결과로 나타난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경계한다.
- ③ 뉴거버넌스론의 하나인 유연조직모형에서는 관리의 개혁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시한다.
-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답] ② 탈신공공관리론은 규제완화와 분권을 강조하던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재규제와 재집권화를 통하여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02. 다음 조직구조의 유형들을 수직적 계층을 강조하는 구조에서 수평적 조정을 강조하는 구조로 옳게 배열한 것은?

가. 네트워크 구조	나. 매트릭스 구조
다. 사업부제 구조	르. 수평구조
미. 관료제	

- ① 나-미-르-가-다
- ② 나-미-가-다-르
- ③ 미-다-르-가-나
- ④ 미-다-가-르-나

[답] ③

0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인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제도 그 자체를 전체로서 이해함을 강조한다.
-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선진 제도 학습에 따른 제도의 동형화를 강조한다.
-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제도의 속성을 강조한다.
-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구성원이 제도를 넘어선 효율극대화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적합한 방식을 찾아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한다.

[답] ④ ④가 옳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조직구성원이 개인의 효율이나 합리성 등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문화나 제도에 부합하고자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 ① [X]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개체주의로 제도의 범위를 이해한다.

② [X]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동일한 제도가 나라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도의 동형화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이다.

③ [X]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경로의존성 및 제도의 장기적 지속성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이다.

0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③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
- ④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답] ③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합동평가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하는 것이지만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는 없다.

05. 행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합목적성을 의미하는 경제성(economy)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되는 본질적 가치다.
- ②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legality)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보다 예외 없이 적용하는 법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 ③ 가외성(redundancy)은 과정의 공정성(fairness) 확보를 위한 수단적 가치다.
- ④ 능률성(efficiency)은 떨어지더라도 효과성(effectiveness)은 높을 수 있다.

[답] ④ 능률성이 산출을 투입에 비교한다면, 효과성은 산출을 목표에 비교하여 판단하는 개념이다. 즉, 능률성을 투입중심으로 본다면 효과성은 산출중심이 되고 능률성이 산출(양적)개념이라면 효과성은 결과(질적)개념으로 양자는 대체로 부합되는 관계이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투입과 목표 달성이 일정한 상태에서 산출이 작아지면 능률성은 떨어지지만, 효과성은 높아진다.

☑ ① [X] 경제성은 능률성을 위한 가치로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이다.

② [X]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은 입법의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법률을 신축성 있게 적용하는 실질적 합법성이라면, 소극적 의미의 합법성은 상황에 무관하게 법률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형식적 합법성을 말한다.

③ [X] 가외성은 행정이 여유분이나 중복분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능중복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충돌 및 책임한계의 모호성을 초래하므로 과정의 공정성을 장담하기 힘들다.

**06.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 ②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 ③ 점중모형은 정책결정의 상황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④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확실성을 갖고 행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답] ② 최적모형은 합리성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합리모형의 틀은 유지하면서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직관적 판단)’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양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질적 분석을 가미한 모형이다.

**07.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 ㄱ. 인과모형의 설정
- ㄴ. 자료 수집 및 분석
- ㄷ. 정책목표의 확인
- ㄹ. 정책평가 대상 및 기준의 확정
- ㅁ. 평가 결과의 환류

- ① ㄱ → ㄴ → ㄷ → ㄹ → ㅁ
- ② ㄴ → ㄷ → ㄱ → ㄹ → ㅁ
- ③ ㄷ → ㄹ → ㄱ → ㄴ → ㅁ
- ④ ㄹ → ㄱ → ㄴ → ㄷ → ㅁ

[답] ③

**08.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적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한다.
- ②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 ③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조이다.

④ 낮은 수준의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구조이다.

[답] ① ①은 기계적 구조의 특성이다. 애드호크라시 조직은 적응력과 창조성이 강하며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비일상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적합하므로 관료제에 비하여 비능률적이며 취약한 설계가 단점이다.

**09. 균형성과표(BSC : Balanced Score Card)의 관점과 측정지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학습과 성장 관점 - 직무만족도
-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 - 민원인의 불만을
- ③ 재무적 관점 - 신규 고객의 증감
- ④ 고객 관점 -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답] ① 학습과 성장 관점은 구성원의 능력개발이나 직무만족도, 제안건수 등과 같이 주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성과를 포함한다.

**● BSC(균형성과관리)의 지표별 특징과 내용**

관점(지표)	특성	내용(예)
재무적관점	민간부문에서 중시하는 전통적인 후행지표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대비차이 등
고객관점	공공부문이 중시하는 대외적 지표	고객만족도, 정책수용도, 민원인의 불만을, 신규 고객의 증감 등
프로세스(절차)관점	업무처리 관점 과정 중심 지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
학습과 성장 관점	미래적 관점의 선행 지표	인적 자원의 역량, 지식의 축적, 정보시스템 구축, 학습동아리 수,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

**10. 오늘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다음 중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하위정부(subgovernment)
-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 ③ 이음매 없는 조직(seamless organization)
- ④ 정책문제망(issue network)

[답] ③ 이음매 없는 조직은 총체적으로 구성된 유기적 구조로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에 의하여 조각난 업무를 재결합시켜 고객에게 원활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성과와 소비자 중심의 유기적 조직이다. 정책네트워크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11. 다음 중 참여와 분권을 본질적 특징으로 포함하는 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계획예산제도
- ② 목표관리제
- ③ 영기준예산제도
- ④ 다면평가제

[답] ① 계획예산제도는 전문막료중심의 운영과 지나친 집권화로 최고관리층(대통령이나 장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하향적 흐름의 예산으로 하급공무원 및 계선기관의 참여가 곤란한 비민주적인 예산제도이다.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② 준시장형 공기업
- ③ 위탁집행형 공기업
- ④ 기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구분(2017 기준)

공기업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공항공사(인천국제, 한국), 부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주) 등 5개 발전회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총 14개)
	준시장형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위탁집행형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등

기타 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	--------------------

13.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내용과 효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④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답]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① [X]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② [X]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X]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징계의 종류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 감봉 :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 정직 : 1~3월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 강등 : 1계급 하향조정(고위공무원단은 3급으로), 신분은 보유,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 해임 :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영향 X
· 파면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 제한

**14. 총체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대표적 총체주의 예산제도이다.
- ② 정치적 타협과 상호조절을 통해 최적의 예산을 추구한다.
- ③ 예산의 목표와 목표 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 ④ 합리적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배분을 지양한다.

[답] ② 총체주의예산은 합리적 분석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합리주의예산이다.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절차적·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예산은 점증주의 예산에 해당한다.

**15.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②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④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답]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 14조에 따르면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16. 정부활동의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어 일반납세자가 정부의 예산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산의 분류방법은?**

- ① 품목별 분류
- ② 기능별 분류
- ③ 경제성질별 분류
- ④ 조직별 분류

[답] ②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공공활동의

대영역)별로 예산내용을 분류하는 것으로 정부업무에 관한 총괄적인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정부예산구조를 알아보기 쉬어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한다.

① [X] 품목별 분류는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를 기준으로 예산내용을 분류하는 것이다.

③ [X] 예산이 국민 경제활동의 구성과 수준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분류이다.

④ [X] 예산내용을 그 편성과 집행책임을 담당하는 조직단위별로 분류한 것이다.

**17. 예산원칙 예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정보원 예산의 비공개는 예산 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② 수입대체경비, 차관물자대 등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③ 특별회계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④ 예산 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인 질적 한정성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답] ④ 질적 한정성(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이란 입법부가 정해진 비목 외 다른 용도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행위이므로 이러한 원칙은 현실적으로 엄격히 지켜지기 어렵다. 그 예외로는 이용·전용 등이 있으며, 입법과목간 융통인 이용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빈번히 활용되지 않지만 행정과목간 전용은 행정부내부에서 가능하므로 전용은 연도말에 빈번하게 행해진다.

**18. 2009년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개발한‘서울버스 앱’은 공공데이터의 무료 개방에 따른 부가서비스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서울버스 앱’의 기반이 되는 웹 기술은?**

- ① 하이퍼링크 중심의 Web 1.0 기술
- ② 플랫폼 기반의 Web 2.0 기술
- ③ 시맨틱웹(Semantic) 기반의 Web 3.0 기술
- ④ 사물인터넷 기반의 Web 3.0 기술

[답] ② 서울버스 앱이란 서울시가 공개한 공공정보를 이용하여 시민이 직접 콘텐츠를 개발한 사례로 도로의 소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여 승객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플랫폼 기반의 웹 2.0 기술을 응용한 것이

다. 단순히 텍스트 링크 위주의 웹사이트의 연결(링크) 집합체를 웹 1.0이라 한다면 웹 2.0 기술은 개방, 참여, 공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중심이되어 직접 정보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웹기술, 즉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하나의 완전한 플랫폼 중심의 웹으로의 발전을 지칭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게시판, 댓글, 블로그, UCC, 지식백과 등이 있다.

19.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지방자치법 제168조).

2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 ②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사·감사를 시행한다.
- ③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는 통상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본다.
- ④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서 적극적 감독, 즉 예방적 감독과 합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답] 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소요경비는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부담한다. 지방의회가 관여하기 힘들고 조례로도 정할 수 없는 순수한 국가사무이다.